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기업이 대비해야 할 주요 법안서]

3차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요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해당 차시에서 학습할 학습주제(목차)를 제시해 주세요.▪ 학습목표: 해당 차시 학습을 통해 <u>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u>를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세요.

▶ 학습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의 변화배경
2. 개인정보 보호법 바로 알기
3.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체 구성

▶ 학습목표

1.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목적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목적과 개정 경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의 위계 파악을 위해 일관성 있는 번호 체계로 작성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I. 개인정보보호법의 변화배경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법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웹서비스(위치정보, 금융서비스, 각종 공공기관 서비스 등)의 전제가 되는 정보 관련한 많은 여러 법률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1. 3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역할

먼저 정보는 3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는 정보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중요한 전제인 정보가 다르다. 3차 산업혁명시대는 디지털정보의 활용이 그 중심이었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부터 '지식정보의 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이 시기의 '정보'란 각종 많은 지식을 축적하여 인터넷을 통해 지식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강했다. 따라서 3차 산업혁명시대 당시 '개인정보'란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적극적 정보적 지위를 갖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러한 지식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단순한 회원가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 뿐이어서, 당시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회원가입 등으로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대다수였다. 이로부터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의 우려를 경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함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2.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역할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서 정보, 특히 개인정보란 3차 산업혁명시대에서와 같이 단순히 특정

사이트의 회원가입 용도가 아닌, 그 자체가 상품성이 매우 높은 가치가 되었다. 즉 4차 산업 혁명은 인공지능과의 융합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의 필수재가 되어버렸다. 맞춤형웹정보서비스의 의미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산업계측에서의 의미는 물론이고 개인의 취향, 역량, 환경 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이용자측에서 편리함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되었다. 비대면서비스는 물론이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 나서지 않아도 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게 되는 장점이 극대화되어 정보주체인 이용자측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희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결합된 웹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산업계측과 맞춤형 웹정보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를 소비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인 이용자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개인정보는 소극적으로 감추는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도구로서 생산재이면서 동시에 소비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개인정보’를 대하는 정보주체측의 변화로부터 개인정보를 대하는 국가의 역할도 변화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과 가장 긴밀하게 관련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는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글로벌 맞춤형정보서비스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높이되 오남용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3법의 법률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3.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목적의 변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뤄졌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당시의 입법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하면서 2020년 개정을 맞게 되고 이러한 개정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도 변모하게 된 것이다.

[#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목적의 변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 목적 (법률 제19465호) (2011.3.29. 제정, 2011.9.30.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목적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2020.8.5. 시행)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2011년 제정당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제1조)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

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었다. 제정목적의 전단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천명하고 있듯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당시에는 개인정보의 활용보다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 동법의 제정 목적이었음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3법의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2020년 2월 4일 크게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법률의 목적(제1조)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화하였다. 즉 개정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전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 정함’으로써 이제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가 동급의 가치로 놓이게 된 것이다.

II. 개인정보보호법 바로 알기

정보(data) 관련한 많은 여러 법률들(「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관련 법률들의 가장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외한 정보 관련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관련 모든 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처리지침을 알려주는 법률이므로 정보처리제공자측이나 정보주체측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데이터 3법에서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서서 정보처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법률의 변화를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시각의 변화를 함께 파악할 수 있으므로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정부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제정목적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 제정전 각종 다양한 정보 관련 서비스가 개발되어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통일된 ‘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입법을 통해 통일된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정보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어 개인정보를 통해 그러한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던 국내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극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침해는 심지어 명의를 도용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하고, 나아가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사기문제 등도 야기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민의 정신적·금전적 피해사례가 속출되고 있는 바, 이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구분하지 않고, 총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즉 2011년 3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법률이 각각 분리되어 있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을 통해 각각 규율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자측에서는 법률마다 차이가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안을 두고 어느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 효과도 달라서 어느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측도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정보처리자들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제는 하나의 통일된 법률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도 개인정보처리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주체측인 이용자측에서도 개인정보를 동의할 때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칫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유출, 오용, 남용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지 이제는 개인정보관련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손쉽게 자신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202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청되던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2020년 2월 4일에 일부개정된 법률이다.

2. 개정 경과

2011년에 3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불과 9년 사이에 9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이뤄진 개정은 앞서 언급했듯이 2020년 2월 4일에 이루어져 같은 해 8월 5일에 시행된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데이터3법의 개정' 중의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020년에 개정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정 법률 중 몇 개의 중요한 개정경과 과정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개정과정의 변화를 통해 첫째, '개인정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고, 둘째, 개정으로 이어지게 된 개인정보 관련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주며, 나아가 셋째, '개인정보'를 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미래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 2013. 8. 6.의 2차 개정(법률 11990호) [2013. 8. 6. 시행]

첫 번째의 개정은 2013년 8월 6일에 이뤄진 2차 개정이다[2014년 8월 7일 시행].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이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처리는 이와 같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가 되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들 정보처리기관에게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음에도 2011년 SK컴즈에서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약 3,500만 명과, 당시 초·중학생이 주로 이용하던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에서 1,3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때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명의도용문제나 보이스피싱(특히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등의 2차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 분석이 이어졌고 실제로 이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보이스피싱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대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시금 동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적으로부터 2차 개정에서는 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②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는 사고발생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규 위반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③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있는 임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의 2차 개정 법률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사고 방지와 함께, 정보처리를 하는 기업 및 개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 2014. 3. 24.의 3차 개정(법률 제12504호) [시행 2014. 3. 24.]

2차 개정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제정당시의 목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 목적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들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월 18일에 신용카드사, 즉 KB국민카드(5,300만명), NH농협카드(2,500만명), 롯데카드(2,500만명)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량 민간사고가 발생하였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언론의 발표는 2014년 1월이었으나, 실제 유출사건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으로부터 정보시장은 물론이고 정보주체인 이용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는 그 규모가 앞서 2차 개정의 촉발사건이었던 SK컴즈 개인정보 유출사건수에 비해 월등히 커서 이제는 전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 대형사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당시 카드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단발성의 사고가 아니며,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누구에게서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더욱 증폭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주장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개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동법의 목적을 기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를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로 변경하였는데, 눈여겨 볼 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종래에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으로 인식하였다가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인류보편적인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3) 2015. 7. 24.의 5차 개정(법률 제13423호) [시행 2015. 7. 24.]

개인정보 보호법의 3차 개정을 촉구하게 된 2014년에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대량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의 몇가지 운영상의 미흡한 점이 새롭게 지적되었다. 즉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책임있는 총괄기구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또한 2차 개정시 부과되었던 과징금만으로는 효과적인 억제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에 따라 보다 더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5차 개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시 다양한 제재방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책임있는 의무를 다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한 5차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대통령 소속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②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 뿐만 아니라 ③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④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 개인정보보호법 5차 개정의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제8조제4항·제5항, 제8조의2, 제11조제1항, 제40조제3항·제4항 및 제63조제4항).
-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함(제3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의2 신설).
- 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제32조의2 신설).
- 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함(제70조 각호 및 제74조의2 신설).

4) 2016. 3. 29.의 6차 개정(법률 제14107호) [시행 2016.9.30.]

개인정보 보호법의 6차 개정의 골자는 개인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③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하고, ④ 해당 법률 등의 제·개정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통제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다 더 강화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 6차 개정의 주요내용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함(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
-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함(제24조의2제1항제1호).
- 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연락처와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함(제30조제1항).

5) 2020. 2. 4.의 9차 개정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다음으로 다섯번째의 중요한 개정은 바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현행법의 개정인, 9차 개정이다. 2020년에 이뤄진 9차 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므로,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개정 당시의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다양한 정부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주장되어 오다가 이러한 요청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활성화), ②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뿐만 아니라 ③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단일화하

였으며, ④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에 있어서도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정되었다.

◇ 개인정보보호법 9차 개정의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함(제2조제1호의2 신설).
-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하며, 현행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함(제7조, 제7조의8 신설, 부칙 제9조).
-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신설).
- 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 마.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제28조의4 신설).
- 바. 누구든지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제6장 신설 등).

III.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체 구성

우여곡절 끝에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후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2020년 2월에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은 형식적으로는 전체 76개 조문에, 총 10개의 장과 부칙(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3월 제정 당시의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0465호)에서도 총 9개의 장에서 7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체 조문수로만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9차 개정시에 조문과 조문사이에 추

가하여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9차 개정에 따라 39개의 조문이 추가되어 본문은 전체 1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총칙(1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목적(1조), 정의(2조) - 개인정보 보호원칙(3조) - 정보주체의 권리(4조)와 국가의 책무(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6조)
개인정보의 처리(3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제1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파기 ■ 개인정보 처리 제한(제2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처리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3절)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4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치의무(29조):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공개(30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31조), 처리방침 공개(32조) - 유출사고시 과징금부과(34조의2)
정보주체의 권리보장(5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열람요구권(35조) -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요구권(36조), 처리정지요구권(37조) - 권리행사방법 및 절차(38조) - 손해배상청구(39조 및 39조의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특례(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39조3) -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파기에 대한 특례(39조의5~6) - 손해배상보장(39조의9) 및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상호주의(39조의1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7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신청(43조), 분쟁조정(47조), 집단분쟁조정(49조) - 조정절차(50조)
개인정보 단체소송(8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소송 대상 및 절차 등 - 확정판결의 효력(56조)
보칙(9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일부 제외(58조) 및 적용제외(58조의2) - 금지행위(59조), 비밀유지(60조), 시정조치(6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69조)
벌칙(10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방해할 목적으로 심각한 지장초래 및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70조) -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수집된 개인정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 등 처리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71조)

	- 안전성 미확보로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변조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73조)
--	--

현재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020년 2월 4일에 일부 개정된 법률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전체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총칙**에는 목적(제1조)과 정의(제2조), 그리고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제3조)을,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5조에서는 국가 등의 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을 밝히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사유 및 세부적 운영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2조), 자율규제에 대한 내용(제13조) 그리고 국제협력(제14조)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은 이제 글로벌시장에서 운영되므로 국제협력은 상호국 모두에게 그 준수여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지침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https://www.privacy.go.kr/pic/cbpr_info.do)’를 2017년 10월에 개소하여 홈페이지에서 주요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제 위반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동법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본격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3장은 다시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과 관련해서 8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절**은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하여 7개 조문으로, **제3절**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제4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라는 표제어로 8개의 조문을 두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제2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공개(제3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것(제31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개인정보 보호의 인증절차마련(제32조의2), 개인정보처리조치의 법적 적합성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33조), 개인정보유출시 통지의무(제34조),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등을 초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제34조의2).

제5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라는 표제어를 달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제35조),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제36조)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도 요구할 수 있다(제37조). 그리고 제38조에서는 이러한 정보주체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동법위반에 따라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규정으로 마련해 두고 있는데(제39조),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의 내용을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제39조의2).

제6장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39조의3 ~ 제39조의15). 본 6장은 2020년 2월 4일의 ‘데이터 3법’이라는 최근 개정에서 신설된 부분인데, 종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사·중복규정이 있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시의 조치 및 책임에 대한 별도의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39조의4),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제39조의5),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39조의6),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제39조의7),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제39조의8),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조치(제39조의9)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제40조) 및 제척·기피·회피(제42조)부터 분쟁조정의 구체적 내용들인 조정신청(제43조), 분쟁조정(제47조), 집단분쟁조정(제49조), 조정절차 등(제50조) 전체 11개 조문으로 그 역할 및 업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단체소송의 대상(제51조), 관할(제52조), 소송요건 등을 적시하고 확정판결시의 효력(제30장) 및 단체소송시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내용(제57조)을 담고 있다.

제9장은 보칙으로서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개인정보(제58조, 제58조의2), 개인정보처리자의 금지행위(제59조) 및 업무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제60조), 침해사실신고(제62조),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제64조),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10장**은 벌칙에 대한 장으로서 형벌에 해당하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내용(제70조 ~ 제73조), 양벌규정(제74조), 몰수·추징규정(제75조)과 함께,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제75조, 제76조)을 담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은 또한 하위규범으로서 대통령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부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이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다양한 소관부처에서 개인정보 관련한 법령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6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7	초·중등교육법	교육부

8	고등교육법	행정안전부
9	주민등록법	
10	전자정부법	
11	전자서명법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관부처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의 시행령이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신용정보법」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관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도 기획재정부가 소관부처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소관부처인 「지방공기업법」, 「주민등록법」,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이 있으며, 그리고 교육부가 소관부처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등이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밖에도 행정규칙도 마련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하는 행정규칙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등이 있으며, 경찰청예규인 행정규칙으로는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며, 각 공공기관마다 공공부문에서 다루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지침을 각각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공시하고 있다.

■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법령종류
1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4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5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6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8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9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10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경찰청예규
11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12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13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국토교통부훈령
14	기상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기상청훈령
15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농림축산식품부훈령
16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훈령
17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법무부훈령
18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병무청훈령
19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20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산림청훈령
21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중소벤처기업부훈령
22	통계청 개인정보보호 지침	통계청예규
23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행정안전부훈령
24	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환경부훈령